

#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박 홍 서  
(한국외국어대학교)

### 〈 차례 〉

- |                         |                          |
|-------------------------|--------------------------|
| I. 서론                   | Ⅲ. 대북 ‘공동통치?’ 북핵문제에 대한 중 |
| Ⅱ. 세력균형? 이익균형? 탈냉전기 중미간 | 미간 협력                    |
| 이익균형의 형성                | Ⅳ. 결론                    |

· 주제어: 중미관계, 화평굴기, 이익상관자, 이익균형, 북핵, 신고전 현실주의의 China-US relations, balance of interest, North Korea nuclear problem, Peaceful rising, Stakeholder, Neoclassical realism

### 【한글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중미간 협력관계의 동인 및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의 하위개념인 ‘이익균형’ 개념을 ‘세력균형’ 개념과 대비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에 따르면, 중미 양국은 1990년대 초중반의 도식적인 세력균형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통된 이익을 매개로 양국간 이익균형을 맞추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국은 최고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속에서 ‘현상유지국가’로 행동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으며, 미국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국제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국이 제기한 ‘화평굴기’와 미국의 이론적 화답인 ‘이익상관자’ 개념은 이러한 중미간 전략적 사고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중미 양국의 협력관계가 투영된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고전적 의미의 외교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제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

- 키신저(Henry Kissinger)<sup>1)</sup>

## I. 서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구도의 해체는 중미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정치적 동인이 되었다. 특히, 중국위협론에서 나타나듯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간주되면서 향후 중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상당수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sup> 실제로 중미관계는 1990년대 초중반 긴장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중미 양국은 인권문제 및 그에 연계된 대중 최혜국 대우 문제 등으로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군사·안보 영역에서도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및 중국의 미사일 기술 확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관계를 형성하였다. 심지어 양국은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시 군사적 분쟁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전망과 달리 중미 양국은 1997년과 1998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소위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 建设性战略伙伴关系)를 수립하면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1999년 중국의 핵기술 절취 의혹사건과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그리고 2001년 4월 미 정찰기 충돌사건 등으로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중미 양국은 반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등의 주요한 국제현안에서 보다 긴밀한 공조를 이루기 시작하였던 것이다.<sup>3)</sup>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중미간 협력관계의 동인 및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중미 양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상호관계를 보다 협력적

1) Henry Kissinger,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s of peace, 1812-22* (Boston: Houghton Mifflin, 1973), p.2.

2)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pp.18-32;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1994), pp.34-77; Denny Ro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1 (Summer 1994), pp.149-168.

3) 램튼에 따르면, 천안문 사건 이후 2000년까지 중미관계는 1) 천안문 사건, 2)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최혜국-인권 연계 탈피, 3) 1995-96 대만해협위기, 그리고 4) 1999년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 및 핵기술 절취위협 사건 등 4번의 "전환점"이 존재하였다. David M. Lampton,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9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p. 15-63. 9.11 사건 이후 중미간 협력관계는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43-159; Brendan Taylor, "US-China relations after 11 September: a long engagement or marriage of conveni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2 (June 2005), pp.181-185 참조.

으로 변화시켜왔는가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장에서 신고전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이론을 그 설명논리로 도입한다. 특히, 신고전 현실주의의 하위개념인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개념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개념과 대비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탈냉전기 중미간 협력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3장에서는 그 경험적 사례로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관계를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결론에서는 중미간 이익균형의 제약 요인들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 II. 세력균형? 이익균형? 탈냉전기 중미간 이익균형의 형성

사실에 대한 모든 관찰은 이미 '이론 의존적(theory-laden)'이라는 과학철학계의 일반적 논거에 따른다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중미관계의 변화는 개별 국제관계 이론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sup>4)</sup> 예를 들어,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적 접근들은 각각의 인과구조에 따라 중미관계를 보다 갈등지향적(현실주의)이거나 협력지향적(자유주의, 구성주의)으로 설명하고 전망한다.<sup>5)</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중미간 협력관계는 현실주의 접근의 이상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월츠(Kenneth N. Waltz)가 기초한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세력균형론) 이론은 이러한 중미간 협력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월츠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로 인하여 국가간 세력배분(distribution of power)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들의 최고 목표가 안보(security)의 추구에 있다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체제내의 가장 강력한 국가나 수정주의적 국가에 대해 세력균형을 구사해 안보위협을 제거하려 한다.<sup>6)</sup> 예를 들어,

4) '관찰의 이론의존성'에 대한 개괄은 Alan Francis Chalmers,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An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Science and Its Methods*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1999), pp.1-18 참조.

5) 중국의 부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Peter J. Katzenstein and Rudra Sil,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in J.J. Suh,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1-33; Goldstein (2005), pp.81-101. 물론, 현실주의적 접근이 반드시 중미관계를 대립적으로, 반면 자유주의/구성주의적 접근이 양국관계를 협력적으로만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주의 이론이라도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며, 그 의도 역시 '방어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갈등적 중미관계는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2 (Fall, 2005), p.39 참조.

6)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102-128. 한편, 머샤이어는 월츠의 '방어적(defensive)' 현실주의에서 더 나아가 '공세적(offensive)'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세력균형을 통한 현상유지에 만족하기 보다는 패권국가가 되려는 공격적 속성을 갖는다. 무정부상태속에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힘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중국과 같은 체제내의 차상위 강대국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속에서 잠재적인 안보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미 세력균형 전략을 통해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중미 양국은 1990년대 후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9.11 테러 이후 반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등의 국제적 주요현안에 협력함으로써 구조적 현실주의의 전망에서 벗어나는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물론, 이러한 경험적 이상사례가 세력균형 이론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월츠가 항변하듯, 세력균형이론이 개별국가의 특수한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마치 수요공급에 관한 경제학의 '시장이론'이 개별기업의 모든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행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론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수한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론'이 필요하듯, 국가들의 구체적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 이론(구조수준)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속성(단위수준)에 관한 '외교정책이론'이 필요하다.<sup>9)</sup> 즉, 탈냉전기 중미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력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양국의 인식 혹은 국내정치와 같은 단위수준의 변인들 역시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은 구조적 세력균형이론을 보완해 탈냉전기 중미관계를 보다 세밀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신고전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국가간 세력배분과 같은 체제수준(제3이미지)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국가능력, 의도,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같은 단위수준(제1, 2이미지)의 변인 역시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특히, 대표적 신고전 현실주의자인 스웰러(Randall L. Schweller)는 소위 이익균형론을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pp.17-22.

7) Kenneth N. Waltz, "Evaluating Theo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December 1997), pp.915-916.

8) 존스톤에 따르면, 탈냉전기 중국이 대미 세력균형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현실주의의 명확한 이상사례라 할 수 있다. Alastair Ian Johnston, "Realism(s) and Chinese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p.264-277. 물론, 중국이 전통적 의미의 '경성균형(hard-balancing)'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기구 및 외교적 수단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소위 '연성균형(soft-balancing)' 전략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강대국의 대미 연성균형 전략에 대해서는 Robert A. Pape,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30:1 (Summer 2005), pp.7-45.

9) 물론, 월츠는 단위수준의 변인을 통해 이론의 설명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럴 경우 이론자체의 엄밀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Waltz(1979), pp.88-99; idem,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 Response of My Critics,"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p.322-345; idem,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 1 (Summer 2000), pp.38-39.

10) Randall L. Schweller, "The Progressiveness of Neoclassical Realism," in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MIT Press, 2003), p.317.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세력균형이론이 간과하던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간 세력변화에 따라 세력균형이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국가의 인식이나 선호(preference) 혹은 국내정치적 비용에 따라 세력균형이외의 대외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sup>11)</sup> 즉, 스웰러는 국가들을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유지(status quo)적 국가와 수정주의(revisionist)적 국가로 구분하고, 동일한 성향을 공유하는 국가들간에는 세력균형의 논리가 도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전쟁 이후 현상유지 국가들 사이에 형성된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 라든지 2차 대전 시기 이태리가 역시 수정주의적 성향의 독일에 편승했던 사실 등은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 세력균형 정책이 아니라 수정주의 국가에 한한 '선별적' 세력균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맥락에서, 급속히 부상하는 신흥강대국이 대내외적 이유로 현상유지적 성격을 갖을 경우 기존의 패권국가와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신흥강대국이 수정주의적 선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한적이라면 패권국가는 '포용(engagement)' 정책을 통해 신흥강대국을 현 국제질서에 편입시킬 것이란 전망 역시 가능하다.<sup>13)</sup>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영미간 세력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미간 이익이 서로 상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1823년 발표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에서 나타나듯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광대한 국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주도의 유럽질서에 도전할 현실적 이유가 없었으며, 영국으로서도 독일이 주요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세력균형을 통해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sup>14)</sup>

이와 같다면, 탈냉전기 중미관계 역시 양국간 도식적인 세력변화가 아니라 그에 따른 양국의 구체적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밀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상하는 중국이 수

11) Randall L. Schweller,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46-68.

12)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Summer 1994), pp.104-106 참조. 이익균형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이익균형론이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익 개념을 '밀수해' 이상사례에 직면한 구조적 현실주의를 방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웰러는 자신의 이론수정은 애드호크 수정이 아니며, 기존의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conditions)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기존이론의 설명력을 한층 제고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익균형론에 대한 비판과 스웰러의 반론은 Jeffrey W. Legro and Andrew Moravcsik, "Is Anybody Still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2 (Fall 1999), pp.29-32; Randall L. Schweller,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December, 1997), pp.927-930; idem, "Correspondence: Brother, Can you Spare a Paradigm?" *International Security*, 25:1 (Summer 2000), pp.174-178 참조.

13) Randall L. Schweller,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in Alastair Ian Johnston,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1999), p.24.

14) 당시 영미 양국의 구체적 국가전략에 대해서는 Mearsheimer(2001), pp.234-266 참조.

정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현상유지적 국가목표를 갖는다면, 세력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미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변경적 목표를 갖는다면, 중미관계에서는 이익균형의 논리보다 세력균형의 논리가 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3년 말 중국이 제기한 소위 ‘화평굴기론(和平崛起論)’은 중국이 미국주도의 현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유지적 국가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향후 수십년간 중국의 최고 국가목표는 세계 경제와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현 국제질서에 대해 위협적인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가와의 공동번영과 주요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물론, 화평굴기론은 1995-96년 대만해협위기 이후 중국이 정립하기 시작한 현실주의적 대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만해협 위기를 ‘중국위협론’의 예증 사례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는 대만해협위기 직후인 1996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리고 1997년 9월 일본과 동맹관계를 조정하면서 대만지역의 안정을 양국간 주요관심사로 포함하는 등 대중국 견제 의도를 보였던 것이다. 중국의 대전략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견제를 차단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무역기구(WTO)나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해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sup>16)</sup>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새로운 대전략은 환영할 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가 헤게모니 미국의 핵심적 대외목표라고 간주한다면, 주요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적 태도는 이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다.<sup>17)</sup>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가

- 
- 15) 화평굴기 개념은 2003년 말 중국개혁개방 포럼위원장인 정삐젠(鄭必堅)이 최초로 제기한 후 중국지도부에 의해 수차례 언급되었다. 화평굴기의 개념 및 그 이유에 대해서는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84:5 (September/October 2005), pp.18-24; 刘建飞, “和平崛起是中国的战略选择,” 『世界经济与政治』, 2006年 第2期, pp.36-40 참조. 한편, 존스톤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수준 및 기존의 세력배분에 대한 도전 등의 기준을 통해 볼때 중국은 스웰러가 정의한 현상변경 국가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Alastair Ian Johnston, “Is China a Status-Quo State?,” *International Security*, 27:4 (Spring 2003), pp.5-56.
- 16) 중국의 새로운 대전략의 동인과 내용은 Goldstein(2005), pp. 102-135 참조.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위해 안정적 대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시각은 叶自成, 『中國大战略』(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第三章; 阎学通, 『中国国家利益分析』(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pp.158-160 참조.
- 17) 탈냉전기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은 구체적으로 1)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2)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지속 및 정치/경제적 현 국제체제의 유지, 3) 적대적 강대국의 출현 저지, 4) 중국과 러시아와의 생산적 관계 유지 등이다.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http://www.nixoncenter.org/publications/monographs/nationalinterests.pdf>> (검색일: 2007.9.1)

1998년에 이미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대량살상 무기 및 핵확산 방지, 자유무역, 환경 및 국제범죄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는 그 해결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따라서 포용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탈냉전기 국가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부시행정부 역시 반테러 전쟁에서 추구한 군사적 일방주의에도 불구하고, 대중 포용정책을 통해 미국주도의 현 국제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 개시된 미중전략대화 및 2006년 12월 개시된 전략경제회담의 정례화, IMF내에서 중국의 위상강화, G-7 국가의 재정부 장관회담에 중국의 참여를 지지하는 등 미국의 대중 포용정책은 다각도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상술한 스웰러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포용정책은 곧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팽창적 수정주의 국가가 아니라 제한적 수정주의 국가 혹은 현상유지 국가로 인식 혹은 유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이 제기한 '이익상관자(stakeholder)' 개념은 화평굴기론에 대한 미국의 이론적 화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Ⅲ. 대북 '공동통치?'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2005년 9월 21일 졸릭(Robert B. Zoellick) 미 국무부 차관은 미중 관계 위원회 보고에서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이 “중국을 국제체제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a responsible stakeholder)로 유도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특히, 졸릭은 “중미관계에 20세기의 냉전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면, 19세기의 세력균형 논리는 더더욱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론적으로도 포용정책이 향후 대중정책의 근간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이 화평굴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북핵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반테러리즘 전쟁 및 이란 핵문제 등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졸릭이 중미 양국의 이익이 공유(상관)될 수 있는 최우선의 사례로 북핵문제를 거론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문제해결 자세는 화평굴기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회(the most pressing opportunity)”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20)</sup>

18) William J. Clinton, Remarks by the President on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June 11, 1998. <http://www.shaps.hawaii.edu/fp/us/clinton-980611.html> (검색일: 2007.6.15). 길핀에 따르면, 헤게모니 국가의 쇠퇴는 대내외적으로 패권의 유지비용이 그 효용을 초과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은 현 국제질서의 유지비용을 중국에 일정부분 '전가(buck-passing)' 시키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길핀의 논의는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156-185 참조.

19) 부시행정부의 대중국 포용정책은 Evans J.R. Revere, The Bush Administration's Second-Term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Remarks to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CSIS) Conference, May 17, 2005. <http://www.state.gov/p/eap/rls/rm/2005/46420.htm> (검색일: 2007.6.15); Daniel W. Drexner, "The New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86:2 (March/April 2007), p.41 참조.

20) 졸릭의 발언은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이와 같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양국간 협력관계의 전형적인 개별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93-94년 1차 북핵위기에 비해 2003년 2차 북핵위기에, 그리고 2006년 3차 북핵위기에 중미간 대북공조가 점차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상황전개라 할 수 있다.<sup>21)</sup> 사실, 1차 북핵위기시 중미 양국은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보다 소극적 혹은 일방적 문제해결을 모색하였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북핵위기가 가시화되자, 중국은 1993년 4월 1일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여부에 대한 IAEA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같은 해 5월 11일 안보리 대북결의안(825호)에는 기권하는 등 북핵문제의 당사자 해결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미국 역시 1994년 6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는 등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군사력을 통한 일방적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결국, 1차 북핵위기시 이러한 중미간 협력의 부재는 탈냉전기 초반 양국간 이익균형이 명확히 형성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22)</sup>

반면, 2차 북핵위기시 중미 양국은 보다 상호 협력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드러내었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당일에 중미 양국 정상은 즉각적으로 북한의 NPT 탈퇴에 찬성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은 1차 북핵위기에 비해 중미관계가 그만큼 협력 지향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sup>23)</sup> 이후에도 중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2003.4)을 개최하고, 이후 3차에 걸친 6자회담(2003.8/2004.2/2004.6)을 북경에서 각각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협의기구를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차 북핵위기는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2005.9.19)을 통해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문제해결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도 이로 인한 양국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기대하는 등 중미간 협력은 1차 북핵위기에 비해 강화된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sup>24)</sup>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http://usinfo.state.gov/eap/Archive/2005/Sep/22-290478.html>. 중국정부는 '이익상관자' 개념을 미국측의 표현(提法)으로 간주해 정부차원의 논평은 피하고 있으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데는 명확히 동의한다. 外交部发言人孔泉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月 24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32610.htm> (검색일: 2007.6.15). 이익상관자 개념에 동의하는 중국내 시각은 周庆安, "中美战略对谁欲明确利益相关者概念", 『人民日报』, 2005年 12月 9日. 반면, 미국이 이익상관자 개념을 이용해 중국을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상관자론은 중국위협론의 '변종' 일 수 있다는 주장은 袁鹏, "中美关系: 新变化与新挑战", 『现代国际关系』2006年 第5期, p.36 참조.

21) 1,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변화는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6년 봄), pp.103-122 참조.

22) 미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핵시설 폭격 계획에 대해서는, <http://archives.cnn.com/2002/WORLD/asiapcf/east/12/15/nkorea.us/index.html> (검색일: 2007.6.15) 참조.

23) "江泽民应约与布什通电话: 就朝鲜核问题交换意见," 『人民日报』2003年 1月 11日 참조.

24) Zoellick(2005): Joseph E. DeTrani, "Six-Party Talks and China's Role as an Intermediary in the Process," Remarks to U.S.-China Economic Security Review Commission,"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10월 9일 핵실험으로 촉발된 3차 북핵위기에 중미 양국의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 역시 놀라운 상황 전개가 아니었다. 2005년 9월 15일 미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이하 BDA) 은행이 달러위폐 및 돈세탁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의 창구임을 비난하고, “우선적 돈세탁우려(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BDA내 북한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sup>25)</sup> 이에 북한은 5차 6자회담 1단계회의(11.9-11)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강력히 비판하고, 12월 2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6자회담의 재개와 금융제재 문제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하였다. 결국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뉴욕접촉이 무산되고 2006년 1월 3일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면서 북핵문제는 다시 난항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sup>26)</sup>

한편, 북미간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중미 양국은 오히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5년 11월 20일 개최된 중미간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미 양국의 공통적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 회견에서 5차 6자회담의 1단계회의가 “성실”하고 “실무적”인 회의였으며, 중요한 성과를 산출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27)</sup> 12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2차 미중 전략대화에서도 양국은 이익상관자 개념에 입각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문제에 있어 양국간 구체적 협력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sup>28)</sup> 뿐만 아니라, 2006년 4월 20일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측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적 이해관계를 재확인하였던 것이다.<sup>29)</sup>

특히, 6차 회담 재개의 핵심적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대북 금융제재문제에 있어 중국이

- 
- March 10, 2005. <http://www.state.gov/p/eap/rls/rm/2005/43247.htm> (검색일: 2007. 6.15); “六方会谈声明是中国外交的胜利”,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 (검색일: 2007.6.15)
- 25)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September 15, 2005.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720.htm> (검색일: 2007.6.15)
- 26) 『연합뉴스』, 2005년 12월 2일; 통일부 북한정보 <http://www.unikorea.go.kr/index.jsp> (검색일: 2007.6.15); 『연합뉴스』, 2006년 1월 3일.
- 27)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지도부로부터 북한의 핵보유는 지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며, 따라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인상(strong impression)”을 받았다고 발언하였다. Condoleezza Rice, Press Briefing on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November 20, 2005.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57412.htm> (검색일: 2007.6.15). 공동기자회견은 “中美元首共同会见记者”, 『人民日报』, 2005년 11월 21일 참조.
- 28) 中美战略对话“加速度”中国也应把握“话语权” 『新华网』, 2005년 12월 8일.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12/08/content\\_3894012.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12/08/content_3894012.htm) (검색일: 2007.6.15)
- 29) Remarks by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H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rrival Ceremony, April 20, 2006 <http://www.state.gov/p/eap/rls/ot/64840.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秦刚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4月 25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48710.htm> (검색일: 2007.6.15)

직간접으로 미국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공감대를 명확히 뒷받침하였다. 중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스탠리 아우(Stanley Au) BDA 총재가 자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자산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대변되어 있다는 추론을 반증하는 것이다.<sup>30)</sup> 더욱이, BDA의 동결조치 직후, 중국은행(the Bank of China)의 마카오 지점 역시 북한자산을 동결하였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감독활동을 강화했다는 사실은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협력을 보다 명확히 시사하는 것이다.<sup>31)</sup>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북미간 갈등구조 속에서 ‘혈맹’인 중국으로부터도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 1월 10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금융제재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중국의 대미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외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최근 발생한 6자회담의 ‘난관’을 중국 측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극복하기를 희망”하였던 반면 후진타오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였던 것이다.<sup>32)</sup> 중국은 이후에도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재개에 장애가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미 양국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혈맹국’ 북한에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하였다.<sup>33)</sup>

이와 같다면,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미 양국으로부터의 고립감을 타개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전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강행은 결국 북중간 긴장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미간 대북공조가 그만큼 강화되는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sup>34)</sup> 실제로 중국은 7월 15일 유엔 대북결의안(1695호)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함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것은 1차 북핵위기시인 1993년 5월 11일 유엔의 대북결의안(825호)에 기권표를 행사하였던 것과는 분명한

30) 미국의 우선적 돈세탁우려 대상 지정으로 BDA로부터 대량의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마카오 행정당국은 정부관리를 파견해 BDA를 지원하는데 머물렀다. 『연합뉴스』, 2005년 9월 18일.

31) 중국의 조치들은 『연합뉴스』, 2006년 7월 24일;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2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9140.html> 2006.11.2 (검색일: 2007.6.15).  
한편, 중국정부는 돈세탁을 포함한 각종의 불법적 금융활동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4月 11日.

32)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보도는 应胡锦涛的邀请金正日对中国进行非正式访问, 『新华网』, 2006年 1月 18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1/18/content\\_4068736.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1/18/content_4068736.htm) (검색일: 2007.6.15)

33)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4月 11日, 2006年 5月 11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51738.htm> (검색일: 2007.6.15)

34)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外交部发言人姜瑜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6月 27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60229.htm>; Daniel Griffiths, “Can China solve N Korea Crisis?” BBC (July 6, 2006)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5153806.stm>) (검색일: 2007.6.15) 북한 미사일 발사 전후 북중관계의 긴장과 중미간 대북 ‘협조체제’의 강화는 이태환, “북한미사일 발사후 북중관계,” 『정세와 정책』, 2006년 9월호 참조.  
([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6-09-04.pdf](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6-09-04.pdf)) (검색일: 2007.9.1)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sup>35)</sup> 미국 역시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은 7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중미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really a quite good one)”임을 확인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두고 중국이 미국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임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또한, 크리스텐센(Thomas Christensen)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중국이 보인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메시지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통과에 있어서의 협조를 두고 중미 양국이 이익상관자임을 확인케하는 “강력한 증거(strong evidence)”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36)</sup>

이러한 중미간 긴밀한 공조관계는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坚决反对)”한다는 전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하고, 10월 14일 대북 무기금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1718호)에 찬성표를 행사하였다.<sup>37)</sup> 비록, 중국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또한 대북 반입 화물에 대한 검색 및 나포에 대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이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행태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이익균형의 극대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더욱이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중직전인 10월 19일 탕자쉬안 특사가 방북해 추가핵실험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10월 31일 북중미간 비공식 북경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도출해 낸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희망하는 미국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태였다. 부시가 이에 즉각적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은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미국이 만족하고 있음을 반증하였다.<sup>39)</sup> 결국,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이후 정회되었던 5차 6

35) 外交部发言人姜瑜就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朝鲜试射导弹问题决议发表谈话, 2006年 7月 16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63308.htm> (검색일: 2007.6.15)

36) “Rice: China to become responsible stakeholder,” *China Daily*, July 22, 2006.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07/22/content\\_647049.htm](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07/22/content_647049.htm); Thomas J. Christensen, Remarks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ugust 3, 2006 <http://www.state.gov/p/eap/rls/rm/69899.htm> (각 검색일: 2007.6.15)

3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 2006年 10月 9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5346.htm>;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0月 12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5938.htm>; 外交部发言人刘建超就朝鲜核试问题安理会决议发表谈话, 2006年 10月 15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6148.htm> (각 검색일: 2007.6.15)

38)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승인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기대는 Condoleezza Rice, Briefing on Upcoming Trip to Asia, October 16, 2006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6/74047.htm> (검색일: 2007.6.15); Glenn Kessler, “U.S. Officials Call On China to Help Enforce U.N. Resolution on N. Korea,” *Washington Post*, October 16, 2006, Page A15; Glenn Kessler, “Rice Sees Bright Spot in China’s New Role Since N.Korean Test,”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2, 2006 참조. 중국은 대북 결의안이 “균형 잡힌 결의안으로 평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밝혔다.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0月 19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6826.htm> (검색일: 2007.6.15)

39) Remarks by President Bush After Meeting With Special Envoy for Sudan, October 31, 2006. <http://www.state.gov/p/af/rls/rm/2006/75356.htm>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측 공식

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 18일 재개되고, 3단계 회의는 2007년 2월 8일 속개돼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련국간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3차 북핵위기는 해소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40)</sup>

이와 같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미간 공조는 2.13합의를 도출해 내는 핵심적 동인이라 할 수 있다. 힐(Christopher Hill) 미 6자 회담 대표의 중국 역할에 대한 거듭된 긍정적 평가는 이를 보다 명확히 시사한다. 힐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북핵문제는 미중정상간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number one issue)”로서 양국 외교부는 매일 접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국간 “거의 동일한(close to identical)” 목표를 위해 협력해 왔으며, 또한, 2.13 합의 도출과정에서 미중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sup>41)</sup> 결국,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중미간 협력은 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라는 양국간 합의 속에서 상호간 국가이익을 상호 부합시키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소국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동맹국인 중국에 의해서조차 제약받았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간 정치의 현실주의적 단면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sup>42)</sup>

#### IV. 결 론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향후 중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탈냉전기 초반의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양국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중미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으며, ‘화평굴기’와 ‘이익상관자’의 개념에서 나타나듯 현 국

발표는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1月 2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8558.htm> (각 검색일: 2007.6.15)

40) 2.13합의의 주요내용은 북한핵시설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이다. 『연합뉴스』, 2007년 2월 13일.

41) Christopher Hill, Briefing on Six-Party Talks, December 13, 2006.

<http://www.state.gov/p/eap/rls/rm/77794.htm>; idem, Interview With ABC, February 13, 2007 <http://www.state.gov/p/eap/rls/rm/2007/80784.htm> 2월 16일 부시-후진타오 전 회통화에서도 부시는 중국의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China Daily*,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7-02/16/content\\_810809.htm](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7-02/16/content_810809.htm) (각 검색일: 2007.6.15).

42) 스나이더에 따르면, 강대국이 약소국과 동맹관계에 있을 때 약소국이 기타 강대국과 분쟁상황에 직면한다면, 강대국은 동맹 약소국으로 인한 기타 강대국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따라서, 강대국은 동맹 약소국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 자국의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며, 극단적으로 기타 강대국과 협력해 약소국에 대한 ‘공동통치(condominium)’를 기도하기도 한다.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July 1984), pp.484-486. 실제로, 과거 5세기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갈등 상황속에서 이러한 양태가 반복되었다. 즉, 1592년 임진왜란시 명은 조선의 의도를 무시한 채 일본과 직접협상을 추구해 확전을 차단하였으며, 1882년 임오군란시 청의 대원군 납치, 1885년 청일간 천진조약 역시 그 대표적 사례이며, 한국전쟁시기에도 미중소 삼국은 한반도를 벗어난 확전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1호, pp.181-200 참조.

제질서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상호간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중미간 이익의 핵심적 접점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화평굴기의 증거로 중국의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하고, 중국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미간 협력관계는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 대미관계를 희망하는 중국의 전략과, 반면 중국을 현 국제질서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유도해 자국의 체계모니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부합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미간 협력관계를 제약하는 동인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력균형의 논리 역시 여전히 중미관계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43)</sup> 우선, 중미간 협력이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면, 그 취약성 역시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테러리즘 및 핵확산과 같은 공동의 위협요인이 소멸한 상황에서도 중미 양국은 이익상관자가 될 수 있는가? 보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최고 국가목표인 경제건설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만족할 것인가? 미국 역시 중국에 자국의 체제내 '위치(position)'를 순수히 양보할 것인가? 중미 양국의 이익균형이 구성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관념'의 변화가 아니고 현실적 국가이익의 상호조정이라면, 이러한 상황들은 향후 중미관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동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4)</sup>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중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저해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중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미간 급속한 관계개선 및 그로 인한 미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전통적 대한반도 안보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2005년 11월 17일 APEC 참석차 방한한 후진타오가 남북한간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동안 부시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대한 중미간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sup>45)</sup>

반면, 대만문제는 현 상황에서도 중미간 이익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중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대만 지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대만문제를 내정문제로 간주하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6)</sup> 이와 같다면, 크리스텐센의 지적대로,

43) 중국군사력에 대한 미국방부의 연례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을 예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면서도 급속한 군사력 증가로 인한 동아시아 세력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http://www.defenselink.mil/pubs/pdfs/070523-China-Military-Power-final.pdf>> (검색일: 2007.9.1)

44) 이와 달리,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는 세력균형의 논리를 넘어 향후 중미간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크다. Banning Garrett, "US-China Relation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error: a framework for analysi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5(48), (August, 2006), pp.414-415.

45) 『연합뉴스』, 2005년 11월 17일 참조.

46) 2005년 2월 19일 미일 외무, 국방 장관회담에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

중국의 전력이 미국에 비해 열등한 상황에서도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미국이 기타 분쟁 지역에 연루되고 미국과 기타 동맹국들간의 협력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 분쟁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sup>47)</sup>

이러한 맥락에서, 상술한 이론적 논거에 따르면, 향후 중미관계의 변화를 보다 적실히 전망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세력배분의 변화(구조수준) 및 이익 균형(단위수준)간의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1) 중미간 세력배분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익균형은 지속되는 상황, 2) 세력배분이 일정한 상황에서 반대로 대만문제 등으로 이익균형이 붕괴되는 상황, 3) 세력배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익균형은 지속되는 상황으로 19세기 후반 영미관계와 유사한 상황, 그리고 4) 세력배분의 변화와 아울러 이익균형 역시 붕괴되는 상황으로 비스마르크 사후 독일과 유럽 강대국들간의 관계와 유사한 상황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다면, 향후 중미간 협력가능성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상황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반면 두 번째 및 네 번째 상황은 중미관계의 악화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상황은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마지막 상황은 중미간 ‘패권 전쟁’의 위협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상황도 반테러리즘과 같이 중미양국의 이익균형을 산출하는 강력한 요인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근시일내에 중미간 세력관계의 급속한 변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일반적 예측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중미간 협력관계는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월츠가 비유하듯, 기업이 아무리 독특하더라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듯이, 중미양국 역시 그 대내외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세력배분으로 구성되는 국제체제 속에서 상호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을 발표하자, 중국은 주권침해로 규정, 강력히 반발하였다. “坚决反对美日发表涉及台湾问题的共同声明,” 『人民日报』, 2005년 2월 21일. 대만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동맹의 의도에 대한 비판은 Jiang Xinfeng, “US-Japan military alliance reflects Cold War mentality,” *People's Daily Online*,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511/05/eng20051105\\_219318.html](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511/05/eng20051105_219318.html) (검색일: 2007.6.15)

47)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4 (Spring 2001), pp.13-14. 2007년 5월 1일 개최된 미일 외무, 국방 장관회담의 공동성명이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대신 지역 안보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수정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성명에서도 표명된 바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이 미일양국의 핵심 현안이라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만문제로 중국을 자극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대만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일 공동성명은 Joint Statement of The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May 1, 2007. (<http://www.state.gov/r/pa/prs/ps/2007/may/84084.htm>) (검색일: 2007.9.1) 참조.

## 참고 문헌

-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2006.
- \_\_\_\_\_, “북핵위기사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중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6집 1호, 2006.
- 이태환, “북한미사일 발사후 북중관계.” 『정세와 정책』, 2006.9.  
 <[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6-09-04.pdf](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6-09-04.pdf)> (검색일: 2007.9.1)
- 『연합뉴스』, 2005년 9월 18일/ 11월 17일/ 12월 2일;  
 2006년 1월 3일/ 7월 24일; 2007년 2월 13일.
- 통일부 북한자료 <http://www.unikorea.go.kr/index.jsp> 내 북한정보 (검색일자: 2007.6.15)
-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2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9140.html> 2006.11.2 (검색일: 2007.6.15)
-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http://www.defenselink.mil/pubs/pdfs/070523-China-Military-Power-final.pdf>> (검색일: 2007.9.1)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 Betts, Richard K.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 1994).
- Chalmers, Alan Francis.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An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Science and Its Methods*.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1999.
- China Daily*,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7-02/16/content\\_810809.htm](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7-02/16/content_810809.htm)  
 (검색일: 2007.6.15).
- Christensen, Thomas J.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4 (Spring 2001).
- \_\_\_\_\_. Remarks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ugust 3, 2006.  
<http://www.state.gov/p/eap/rls/rm/69899.htm> (검색일: 2007.6.15)

- Clinton, William J. Remarks by the President on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June 11, 1998. <http://www.shaps.hawaii.edu/fp/us/clinton-980611.html> (검색일: 2007.6.15)
- CNN, <http://archives.cnn.com/2002/WORLD/asiapcf/east/12/15/nkorea.us/index.html> (검색일: 2007.6.15).
- Drexner, Daniel W. "The New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86:2 (March/April 2007).
- DeTrani, Joseph E. "Six-Party Talks and China's Role as an Intermediary in the Process." Remarks to U.S.-China Economic Security Review Commission. March 10, 2005. <http://www.state.gov/p/eap/rls/rm/2005/43247.htm> (검색일: 2007.6.15)
- Friedberg, Aaron L.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2 (Fall, 2005).
- Garrett, Banning. "US-China Relation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error: a framework for analysi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5(48) (August, 2006).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Griffiths, Daniel. "Can China solve N Korea crisis?" *BBC* (July 6, 2006)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5153806.stm> (검색일: 2007.6.15)
- Hill, Christopher. Briefing on Six-Party Talks. December 13, 2006. <http://www.state.gov/p/eap/rls/rm/77794.htm> (검색일: 2007.6.15)
- \_\_\_\_\_. Interview With ABC. February 13, 2007. <http://www.state.gov/p/eap/rls/rm/2007/80784.htm> (검색일: 2007.6.15)
- Jiang, Xinfeng. "US-Japan military alliance reflects Cold War mentality." *People's Daily Online*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511/05/eng20051105\\_219318.html](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511/05/eng20051105_219318.html) (검색일: 2007.6.15)
- Johnston, Alastair Ian. "Realism(s) and Chinese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Is China a Status-Quo State?" *International Security* 27:4 (Spring 2003).



- Joint Statement of The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May 1, 2007  
 <<http://www.state.gov/r/pa/prs/ps/2007/may/84084.htm>> (검색일:2007.9.1)
- Katzenstein, Peter J. and Rudra Sil,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in J.J. Suh,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Kessler, Glenn, "U.S. Officials Call On China to Help Enforce U.N. Resolution on N. Korea."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6, 2006.
- \_\_\_\_\_. "Rice Sees Bright Spot in China's New Role Since N.Korean Test."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2, 2006.
- Kissinger, Henry. *A world restored :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s of peace, 1812-22*. Boston: Houghton Mifflin, 1973.
- Lampton, David M.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9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Legro, Jeffrey W. and Andrew Moravcsik. "Is Anybody Still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2 (Fall 1999).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 Pape, Robert A.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30:1 (Summer 2005).
- Remarks by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H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rrival Ceremony. April 20, 2006. <http://www.state.gov/p/eap/rls/ot/64840.htm> (검색일: 2007.6.15).
- Remarks by President Bush After Meeting With Special Envoy for Sudan. October 31, 2006. <http://www.state.gov/p/af/rls/rm/2006/75356.htm> (검색일: 2007.6.15)
- Revere, Evans J.R. The Bush Administration's Second-Term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Remarks to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CSIS) Conference, (May 17, 2005). <http://www.state.gov/p/eap/rls/rm/2005/46420.htm> (검색일: 2007.6.15)
- "Rice: China to become responsible stakeholder." *China Daily*, July 22, 2006.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07/22/content\\_647049.htm](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07/22/content_647049.htm) (검색일: 2007.6.15)
- Rice, Condoleezza. Press Briefing on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November 20, 2005.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57412.htm> (검색일: 2007.6.15)

- \_\_\_\_\_. Briefing on Upcoming Trip to Asia. October 16, 2006.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6/74047.htm> (검색일: 2007.6.15)
- Roy, Denn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1 (Summer 1994).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Summer 1994).
- \_\_\_\_\_.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December, 1997).
- \_\_\_\_\_. "Correspondence: Brother, Can you Spare a Paradigm?" *International Security* 25:1 (Summer 2000).
- \_\_\_\_\_. "The Progressiveness of Neoclassical Realism." in Colin Ela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MIT Press, 2003.
- \_\_\_\_\_.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in Alastair Ian Johnston,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1999.
- \_\_\_\_\_.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1984).
- Taylor, Brendan. "US-China relations after 11 September: a long engagement or marriage of conveni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2 (June 2005).
-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http://www.nixoncenter.org/publications/monographs/nationalinterests.pdf> (검색일: 2007.9.1)
-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September 15, 2005)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720.htm> (검색일: 2007.6.15)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_\_\_\_\_.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 Response of My Critics."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_\_\_\_\_. "Evaluating Theo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December 1997).

\_\_\_\_\_.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 1 (Summer 2000).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5).

Zoellick, Robert B.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http://usinfo.state.gov/eap/Archive/2005/Sep/22-290478.html> (검색일: 2007.6.15)

"坚决反对美日发表涉及台湾问题的共同声明." 『人民日报』 2005年 2月 21日.

"江泽民应约与布什通电话: 就朝鲜核问题交换意见." 『人民日报』 2003年 1月 11日.

"六方会谈声明是中国外交的胜利",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

(검색일: 2007.6.15)

刘建飞, "和平崛起是中国的战略选择," 『世界经济与政治』 2006年 第2期.

外交部发言人孔泉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月 24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32610.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4月 11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45666.htm>

(검색일: 2006.6.15)

外交部发言人秦刚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4月 25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48710.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5月 11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51738.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姜瑜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6月 27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60229.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姜瑜就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朝鲜试射导弹问题决议发表谈话, 2006年 7月 16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63308.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0月 12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5938.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刘建超就朝核试问题安理会决议发表谈话, 2006年 10月 15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6148.htm>

(각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0月 19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6826.htm>

(검색일: 2007.6.15)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2006年 11月 2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8558.htm>

(각 검색일: 2007.6.15)

阎学通, 『中国国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叶自成, 『中国大战略』,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应胡锦涛的邀请金正日对中国进行非正式访问, 『新华网』, 2006年 1月 18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1/18/content\\_4068736.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1/18/content_4068736.htm)

(검색일: 2007.6.15)

袁鹏, “中美关系: 新变化与新挑战”, 『现代国际关系』 2006年 第5期.

“中美元首共同会见记者”, 『人民日报』, 2005年 11月 21日 참조.

中美战略对话“加速度” 中国也应把握“话误权” 『新华网』, 2005年 12月 8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12/08/content\\_3894012.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12/08/content_3894012.htm)

(검색일: 2007.6.1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 2006年 10月 9日.

<http://www.mfa.gov.cn/chn/xwfw/fyrth/t275346.htm>

(검색일: 2007.6.15)

周庆安, “中美战略对话欲明确利益相关者概念”, 『人民日报』, 2005年 12月 9日.

## A Emerging Sino-U.S. Concert System after the Cold War? :

### China-U.S. Cooper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Diplomacy

Park, Hongse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y have China-U.S. relations proceeded favorably since the late 1990's despite abundant gloomy prospects over their future relations righ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article attempts to answer this question and analyze, as a case, the particular process of their cooper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To meet this, this article pays its theoretical attentions to the concept of 'balance of interest' made by neoclassical realist theories. According to this, states do not respond mechanically to distribution of power as the balance of power theory predict. Rather, states' behavior are generally affected by their preferences and intentions. The currently emerging Sino-US Concert system, if any, can be explained by this perspective. That is, the two sides are now likely to take advantage of each other's strategic importance for their own interests; while U.S. seeks to decrease its overtaxed burden as a hegemonic power by passing the buck to China, China is also not reluctant to comply with such U.S. demands for its stable economic development.

투 고 일 : 2007년 6월 30일  
심 사 일 : 2007년 7월 16일  
심사완료일 : 2007년 8월 29일